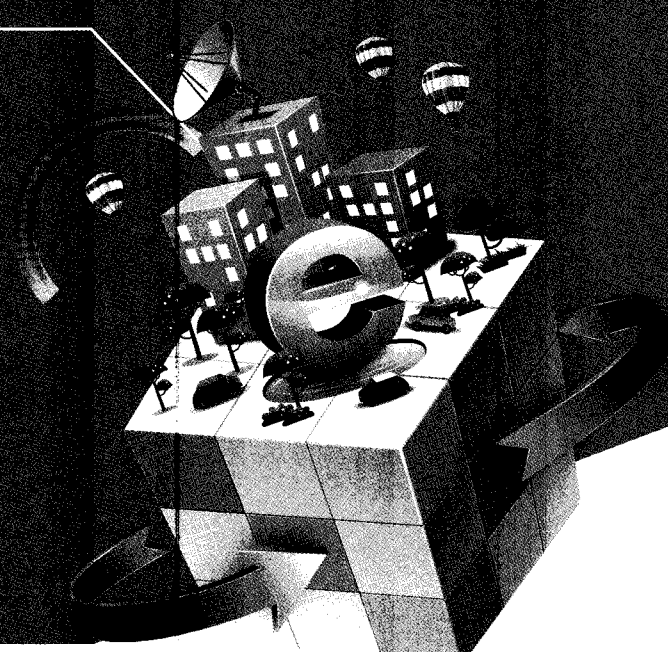


건설 소식

CONSTRUCTION NEWS



**용접·용단작업장 소화기
비치 의무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 국
 무회의 통과

앞으로 용접·용단작업장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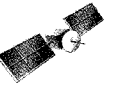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최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사장 등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착화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반경 5m 이내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사장 등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 용접 불티가 폭발성·가연성 물질에 비산·접촉돼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 주변(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적치하거나 비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공사장 등에서 작업자가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스스로 취하게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설사업관리 시스템 통합 추진

기획부터 설계·시공·유지보수까지 단계별 업무 전산화

서울시가 현재 각 발주 부서·기관별로 달리 운영하는 건설사업관리(PMIS)를 한군데로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인 'One-PMIS'를 만들기로 하고 최근 관련 용역사를 선정,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시스템 구축은 경쟁입찰을 통해 건설전문IT 업체인 상아 매니지먼트가 맡았다.

PMIS는 건설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유지보수까지 단계별 업무의 프로세스를 전자화하고 정보 및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2000년 지하철 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PMIS를 처음 도입했으나, 이후 공사형태 및 관련 부서·기관에 따라 CPMIS(도로·교량 중심), TPMIS(구청·산하기관 공사) 등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이를 One-PMIS로 표준화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조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층적 구조의 PM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One-PMIS는 기본적인 시스템 통합 외에도 전자 문서시스템 등을 통한 자료입력의 최소화를 구현하고, 시공사·감리사 등 주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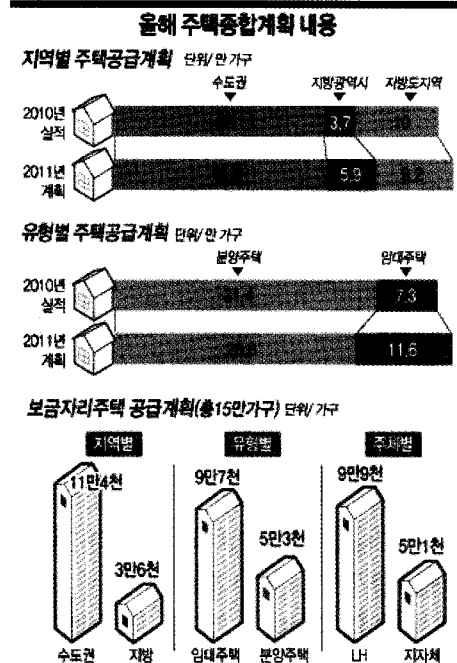
또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건설알림이, 흥은행시스템과도 연계해 정보제공도 고도화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울시의 건설사업 현황을 한 눈에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One-PMIS는 하나의 사업뿐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EPMS도 가능케 한다. 상아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EPMS를 적용할 경우 교량, 광장,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관리해 지역 개발의 로드맵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내로 One-PMIS가 구축될 경우 시의 모든 건설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효율적 관리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반으로 줄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전국에 주택 40만가구 공급

보금자리 물량 70~80%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올해 전국에 4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만 가구, 지방 15만 가구가 공급되

며 지방은 부산, 대전 등 그동안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총 15만가구가 공급되며 분양주택의 70~80%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가 수도권 25만 가구, 지방 18만가구 등 총 43만가구로 예상됐지만, 현재 7만2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감안해 올해 주택 인허가 목표를 40만4000가구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수립했던 목표물량(40만1000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며 인허가 실적(38만7000가구)에 비해서는 1만7000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5만가구, 지방에 15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연립 등 분양주택이 28만 8000가구이며, 임대주택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실적(7만3000가구)보다 60%(4만3000가구) 늘어난 11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수요와 주요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N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정한 21만가구에서 6만가구를 축소한 1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은 9만7000가구, 분양주택은 5만3000가구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 하남, 미사에서 각각 9월과 11월에 분청약을 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주택형은 소형 위주로 재편된다.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고, 60~85㎡는 분양주택의 30%를 공급하되 이중 상당수를 전용 74㎡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연립 등 소형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민간이 신축할 경우 NH가 매입해 임대주택(연간 2

만가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취지에 맞게 서민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형을 줄였다"며 "NH 등 공공부문의 인허가를 독려해 40만가구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녹색전문가 2014년까지 400명 키운다

서울시가 2014년까지 그린카 등 서울형 녹색산업 전문가 400명을 양성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녹색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형 4대 녹색산업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산업 여건에 맞는 그린카·녹색건축·신재생에너지·LED조명 등을 서울형 4대 녹색산업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매년 100명씩 2014년까지 총 400명 이상의 녹색기술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가 맡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은 대학원 트랙과정(40명), 산업체 재직자 과정(60명)으로 나뉜다. 대학원 트랙과정은 시립대와 고려대·경희대 등 시립대와 학점교류를 체결한 13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학점교류 확대를 통해 교육 대상을 더 넓힌다는 방침이다.

산업체 재직자 과정 대상은 서울 소재 녹색기업 재직자 또는 서울시 3년 이상 거주기업체 종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대학원과정 트랙 이수자에게 학기당 300만원의 장학금 및 월 1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산업체 재직자 과정은 무료로 운영된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이번 녹색기



술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저탄소 녹색도시로 이끌어 갈 전문가를 길러냄과 동시에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 건물 에너지절감 지원조건 대폭 개선

ESCO사업자로 대상 확대
건물당 최대 10억원 특별용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의 대상자가 정부의 ESCO 사업자로까지 확대된다. 용자 이율도 ESCO 사업과 동일하게 낮춰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BRP 특별용자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해 올해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BRP란 시설개선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BRP사업 결과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조건을 개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건물소유자로 한정됐던 용자 신청 대상자를 정부의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민간 BRP 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현실적으로 BRP 참여가 어려웠던 공동주택 공용부분, 소유자가 구분된 판매시설, 종교단체 건물과 대학교 등에서도 BRP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건축주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용자이율도 정부의 ESCO사업과 동일하게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특히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절감하기 위해 BRP를 추진하거나 단열보강,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전체 건물의 70% 이상 적용할 경우 2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

다. 지원금액은 기존의 절약시설 항목당 용자한도를 없애고 절감사업비의 80%까지, 건물당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원개선 내용을 적용한 사업대상자를 7월 7일부터 신청·접수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총 251억원의 용자를 지원해, 총 245개의 민간건물이 BRP사업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간 온실가스 4만1000t을 절감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매년 75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서울지역 온실가스 64%가 건물의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모든 건물에 BRP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배관 공법 등 4건,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자들의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을 심사해 4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은 ▲공동주택 세면욕실의 이중배관 공법(제623호) ▲보강재 직접 현장 투입방식으로 하수관거 비굴착보수공법(제624호) ▲GPS를 이용한 고층 구조물의 거푸집 수직도 관리 기술(제625호) ▲안전시설이 조합된 작업틀을 이용한 건축물 외벽마무리 가설공법(제626호)이다.

623호는 공동주택의 세면욕실을 시공할 때 물이 빠져나가는 관을 이중으로 설치해 세면욕실의 층간소음을 줄이고, 배관에 물이 새거나 이물질로 인해 막힐 때 보수가 편리하게 설치하는 공법이다.

624호는 파손된 하수도관을 보수할 때 기존 공법

에서는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해 냉동차로 이동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보강튜브를 경화시키는 물질을 현장에서 직접 칠투시켜 땅을 파지 않고 보수하는 공법이다.

이밖에 625호는 고층 건축물 공사시 GPS를 이용해 거꾸집이 수직방향으로 똑바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골자고, 626호는 안전시설과 작업시설이 조합된 특수한 형태의 작업틀을 구성해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고 인양장치를 이용해 한 층씩 상승시키면서 연속으로 외벽 마감을 시공하는 기술이다.

**하도급분쟁 10건 중 7건
합의조정으로 해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올들어 103건 처리

올해 들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건설분야 하도급 분쟁이 모두 103건, 이 중 조정 성립이나 신고 취하 등으로 해결된 분쟁이 6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이동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7월까지 모두 4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갖고, 접수된 하도급분쟁 103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 결과 조정이 성립된 분쟁이 55건, 신고 취하된 분쟁이 9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된 분쟁이 24건, 각하·반려(불개시)된 분쟁이 15건을 차지했다. 불개시된 분쟁을 제외한 전체 조정 건수(88건) 중 조정이 성립되거나 신고취하됨으로써 해결된 사건(64건) 비율이 73% 달했다.

사안별로는 공사비 미지급에 관한 분쟁이 전체의 60.3%를 차지했고 추가공사비 미지급 관련 분쟁이 19.9%, 어음할인으로 및 지연이자 관련 분쟁이 11.9%, 기타 7.9% 등이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신고된 하도급분쟁은 총 133건에 달했고 이 중 4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103건을 처리했으며 현재 30건의 사안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많은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균 70% 이상의 분쟁을 합의조정으로 이끌어내는 등 매우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사건을 신고했던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도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모여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10건 중 7건 이상을 합의조정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안심과 기대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